

대선후보 경선 최대 승부처 호남 순회경선 실시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6일 익산 원광대 문화체육관

‘전략적 투표’ 호남 표심 따라 승부 향방 갈린다

전략적 투표성향으로 민주당의 역대 대통령 후보 경선 때마다 본선에 진출할 후보를 사실상 선택해온 호남지역 순회 경선이 오는 9월 25일과 26일 잇따라 실시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호남 순회경선은 광주·전남의 경우 25일 오후 3시 3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북은 26일 오후 3시 30분 익산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각각 열린다.

충청권에서 과반 표심을 얻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1위를 굳히기 위해, 전남 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는 전세를 뒤집기 위해 ‘당의 심장’인 호남에서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열린 충청권 경선에서는 이 지사가 2만1047표(54.72%)를 얻어 과반을 차지했다.

이 전 대표는 1만841표(28.19%)로 뒤를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이어 정세균 전 총리 2711표(7.05%), 추미애 전 장관 2619표(6.81%), 박용진 의원 911표(2.37%), 김두관 의원 334표(0.87%) 순이다.

1, 2위를 차지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25일과 26일 추석 이후 열리는 호남 순회 경선에서 최대한 큰 표 차이로 승리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뛰고 있다.

양 캠프 모두 이번 경선의 중대 변곡점은 12일 1차 슈퍼위크와 25일 광주전남 경선이라고 보고 있다.

64만여 명의 국민·일반당원 투표결과가 한꺼번에 공개되는 1차 슈퍼위크는 향후 경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당 핵심지지기반인 호남 경선의 결과는 현재의 구도가 고착되느냐 변경되느냐는 결정짓는 변수령이 될 전망이다.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호남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 결과는 본선 진출자가 누구냐는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돼 왔다.

호남 선거인단 규모는 충청권의 3배인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다.

당 핵심 관계자는 “1차 슈퍼위크에서 이번 경선의 구도가 드러나고, 호남 경선은 사실상 승부의 향방을 예측하는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별 투개표 일정·방법			
※ 제13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09.06, 월)에 따라 전국대의원 투표방법이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재외국민 대상 온라인투표는 10월6일(수) ~ 10월 8일(금) 진행됩니다.			
날짜	지역순회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국민일반당원
[2주차] 9.6(월)~9.12(일)	대구경북 개표: 9.11(토)	온라인투표(9.7~9.8) 강제ARS투표(9.9~9.10) 자발ARS(9.11)	현장투표(9.11) *1·2차 모집 시 유선전화 사전신청자에 한함
	강원 개표: 9.12(일)	온라인투표(9.8~9.9) 강제ARS투표(9.10~9.11) 자발ARS(9.12)	현장투표(9.12) *1·2차 모집 시 유선전화 사전신청자에 한함
	1차 슈퍼위크 개표: 9.12(일)	해당 없음	온라인투표(9.8~9.9) 강제ARS투표(9.10~9.11) 자발ARS(9.12)
[3주차] 9.20(월)~26(일)	광주전남 개표: 9.25(토)	온라인투표(9.21~9.22) 강제ARS투표(9.23~9.24) 자발ARS(9.25)	현장투표(9.25) *1·2차 모집 시 유선전화 사전신청자에 한함
	전북 개표: 9.26(일)	온라인투표(9.22~9.23) 강제ARS투표(9.24~9.25) 자발ARS(9.26)	현장투표(9.26) *1·2차 모집 시 유선전화 사전신청자에 한함
[4주차] 9.27(월)~10.3(일)	제주 개표: 10.1(금)	온라인투표(9.27~9.28) 강제ARS투표(9.29~9.30) 자발ARS(10.1)	현장투표(10.1) *1·2차 모집 시 유선전화 사전신청자에 한함
	부산·울산·경남 개표: 10.2(토)	온라인투표(9.28~9.29) 강제ARS투표(9.30~10.1) 자발ARS(10.2)	현장투표(10.2) *1·2차 모집 시 유선전화 사전신청자에 한함
	인천 개표: 10.3(일)	온라인투표(9.29~9.30) 강제ARS투표(10.1~10.2) 자발ARS(10.3)	현장투표(10.3) *1·2차 모집 시 유선전화 사전신청자에 한함
	2차 슈퍼위크 개표: 10.3(일)	해당 없음	온라인투표(9.29~9.30) 강제ARS투표(10.1~10.2) 자발ARS(10.3)
[5주차] 10.4(월)~10.10(일)	경기 개표: 10.9(토)	온라인투표(10.5~10.6) 강제ARS투표(10.7~10.8) 자발ARS(10.9)	현장투표(10.9) *1·2차 모집 시 유선전화 사전신청자에 한함
	서울 개표: 10.10(일)	온라인투표(10.6~10.7) 강제ARS투표(10.8~10.9) 자발ARS(10.10)	현장투표(10.10) *1·2차 모집 시 유선전화 사전신청자에 한함
	3차 슈퍼위크 개표: 10.10(일)	해당 없음	온라인투표(10.6~10.7) 강제ARS투표(10.8~10.9) 자발ARS(10.10)

김승남 도당위원장 등 전남 국회의원 10명,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재정분권 개선 촉구” 공동건의

김승남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전남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크게 만들고 있다”며 비수도권의 열악한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지난 6월 1일 당 재정분권 특위에 전달했다.

전남 국회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왔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조6천억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3년 간만 한시 보전하던 것을 최대 5년 이상 연장하고, 2단계 재정분권 논의 시 이를 별도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 간 세수격차가 급심한 상황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감소하는 지방교부세를 미보전해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지역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을 반드시 보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하면서 낙후지역 개발에 지원됐던 균특회계 3조6천억원을 지방으로 이양, 그 재원은 22년까지 3년 한시 보전하는 지방세립을 2019년도에 개정된 바 있다.

한편 건의문에는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신정훈(나주·화순), 김원이(목포), 주철현(여수·시암), 김희재(여수·시울),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여순사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희생자와 유족 아픔 치료해
진정한 화해와 용서 이뤄내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특별법안을 발의한 지 20년 만이다.

이제 분단을 전후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여순사건의 실체와 진실이 규명되고, 통한의 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온 유가족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도민·당원과 함께 역사적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크게 환영하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하루 빨리 이뤄져 다시는 이러한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망국적인 이념대립에서 벗어나 화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별히 올해 10월 19일 제73주기 추념일에는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모두 참여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치료해주어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뤄내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염원한다.

2021. 6. 29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전남 내년도 국비 예산 7조5천억 원 확보

경전선 전철화 및 남부권광역관광개발 등 핵심사업 대거 반영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등 미래 신성장 산업 첫 단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남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미래 신성장산업 등 지역 현안과 블루 이코노미 핵심사업이 대거 반영돼 국비 7조 5천억원을 확보했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남의 국비 확보액은 7조5천13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300억원여가 늘어났다.

SOC의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사업 1천200억 원을 비롯한 28개 사업 8천640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2천617억원도 확보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광주~완도(전남 서남부) 간 고속도로 1단계 1천800억원이 반영돼 2024년 완공이 기대된다.

연구개발(R&D) 분야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5억원 등 12개 사업 245억원이 반영됐다.

1조원대에 달하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대형 연구인프라 불모지인 전남에 유치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너지 전략산업 분야는 EV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정보체계 구축·운영, 전력 기자재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등 21개 사업 554억원을 확보했다.

전남 제조업의 핵심 거점인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은 소재 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80억원 등 21개 사업 977억원이 확정됐다.

또 수소 추진 레저 어선 및 기자재 개발 19억원 등 8개 사업 796억원이 반영돼 전남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바이오·백신산업 분야는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

축사업 14억원 등 13개 사업 415억원이 포함됐다.

농·수산 분야는 64개 사업 3천990억원을 확보했으며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4억원도 반영됐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천혜의 전남 갯벌과 관련, 신안 추포도 갯벌 생태계 복원 14억원, 순천 화포해역 갯벌 생태계 복원 24억원도 확보했다.

관광·문화 분야는 전남도가 기획해 건의한 남부권광역관광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 10억원, 한국섬진흥원 설립 47억원, 전남 디지털 애니메이션 센터 건립 2억원 등 15개 사업 772억원이 반영됐다.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와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등 건설 사업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전남도는 이들 사업과 함께 전라선 고속철도건설, 해상풍력 지원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속히 선정되도록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더불어광장 2021. 09. 15 (제29호)
발행인 | 김승남 **편집인** | 홍지영
발행처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무안 라-0002호 기타간행물 월간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403호
TEL : 061-287-1219 FAX : 061-287-0415

“목포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김원이, ‘청년정치아카데미’, 성폭력 교육 등 교육연수 확대



김원이 의원(목포지역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 예비정치인을 위한 청년정치 아카데미와 성폭력 예방교육 강좌를 잇따라 개최했다. 목포지역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부터 두 달간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와 예비 정치인을 위한 ‘제1기 더민주 목포 청년정치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목포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주 토요일 총 6회의 강연 및 토론으로 구성된다. 강사진으로는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현역 정치인과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방자치, 정치개혁, 평화통일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김원이 의원의 강연을 시작으로 고민정 의원(서울 광

진구을),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종식 목포시장,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 김승남 도당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의 특강으로 구성된다. 참가대상은 만18~45세의 목포시민으로 선착순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5만 원이다. 강연 장소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이다. 또한 최근 한국사 강의로 큰 인기

를 모은 최태성 강사(큰별쌤)를 초청해 ‘근현대사, 목포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당원과 함께 역사토크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목포지역위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제고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인소울성장교육연구소 김항심 대표를 초청,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민주당 소속 시·도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참여해 선출직 공직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

육’을 받았다. 김 대표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성희롱 등 폭력 행위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강의를 들은 후 “오늘 강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2차 가해 의혹과 거짓해명 의혹이 일었던 양향자 국회의원을 민주당이 제명하기로 결정한 것과 맞물려 지역 정치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시의적절한 교육으로 평가된다.

김원이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



김원이 의원은 지난 7월 7일 (사)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21대 국회 1차년도(2020년 5월30일~2021년 5월30일)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의정대상은 12가지 항목의 의정활동을 계량화해 분석하고 의정활동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김 의원은 21대 보건복지위, 운영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개의 상

임위원회에서지난 1년 간 4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중 13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목포대 의대 설립, 탄소중립 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해상풍력 원스톱법안 발의, 지방정부 재정확보를 위한 입법, 청년이 돌아오는 지방을 만드는데 앞장서왔다.

김원이, 지역현안 해결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목포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 5억원, 용해지구 어울림도서관 건립 10억원 배정

김원이 의원은 지난 6월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목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엔 확보한 특별교부세 15억원은 ▲목포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5억원) ▲용해지구 문화시설(어울림도서관) 건립(10억원) 사업에 사용된다. ‘박스파크’는 청년들의 활동이 많

은 지역을 선정해 청년공간 혁신거점을 박스파크 형식으로 조성하고,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과 혁신실험을 응원하는 열린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용해지구 문화시설(목포 어울림도서관) 건립사업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용해지구에 지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주거지 주차장을 포함한 문화시

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목포시의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해 이번 특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박스파크’ 사업은 청년쉼터, 공유주방 등 열린 소통공간으로써 목포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청년이 다시 찾고 싶은 목포,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가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목포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의료행위 제재처분 시 전문병원 지정 취소

김원이,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업 정지 3개월 이상 등 전문병원 지정 취소 근거마련

김원이 의원은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선정,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알코올 등의 진료분야다. 현재 제4기 1차년도(21년 1월~23년 12월) 전문병원으로 전국

총 101개 병원이 지정된 상태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신설했다. 또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영업정지되거나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불법의료행위를 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문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월 31일 본회의

주요 법안 처리 성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 11억 원으로 상향
종부세법



원격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디지털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학력보장법



예술인들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
예술인권리보장법



민간법원이 군 성범죄 관련 수사 담당하는
군사법원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철현 의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 제정 ...정점식 의원과 공동 추진

수산인 부담 경감 · 악취 해결 · 연안 환경정비 효과 기대



주철현 의원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경남 통영 · 고성)과 공동 추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주철현 · 정점식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의 제정과정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 여야 경계를 넘어 농어가 소득증진과 복지향상,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은 주 의원이 지난해 6월30일, 정 의원은 올해 2월17일 각각 발의했다. 이후 두 법안은 농해수 상임위 심사과정

에서 대안 법안으로 정리돼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수산부산물을 수산물에 어획, 채취, 양식, 가공하는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정의했고 굴 폐각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은 연평균 85만톤으로 이중 굴 폐각은 매년 30여만톤이 발생하지만 9만톤 가량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하루 300kg 이상 발생하면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안 곳곳

에 방치되고 있다.

법안은 △국가적 차원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수산부산물 자원화 시설 설치 · 운영 관련 정부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률 제정으로 수산인 부담 경감과 악취 해결, 연안 환경정비 등 어촌 주민들의 경제 ·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앞으로도 여야의 경계를 넘어 농어가 소득증진과 복지향상,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수시 남면, '2021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섬 주민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 기대”...주철현 의원

여수시 남면이 법무부 '2021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호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월 1일 여수시 남면을 맞춤형 범죄예방 컨설팅과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수행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 대상지로 지정했다.

법무부는 여수시 남면에서 7,200만원의 예산으로 주민 면담 및 자료수집, 범죄 영향평가,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기초설계 등의 범죄예방 컨설팅과 지역 주민공동체 조직 · 운영 등의 주민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지난 2010년 법무부 범죄예방국장을 지냈다.

'2021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안산시 상록수역, 보령시, 삼

척시 근덕면, 용인시 처인구, 함안군 가야읍, 진천군 진천읍도 여수시 남면과 함께 선정됐다. 여수는 지난해 봉산동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주 의원은 "여수시 남면이 지난 2월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이 사업을 통해 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란? =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로 범죄자들이 범행을 쉽게 실행하지 못하도록 방범환경을 조성하거나 범죄 행위가 쉽게 노출되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범죄예방 기법이다.

주철현, 경도 관광개발 관련 기관·기업 간담회

주철현 의원은 지난 10일 지역 사무실에서 광양경제자유구역청, 남양건설, 미래에셋 관계자들과 함께 경도대교 건설,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건립 등 경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 의원은 이날 경도대교 건설과 관련, 금성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후 공사에 착수하되 중형규모 요트를 통항을 위해 25m 이상의 높이로 건설하고 공사과정에 지역 업체 참여 등을 요청했다.

이어 생활형 숙박시설은 당초 투자협약에는 없던 사업으로 시민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초 제시했던 최고급 해양관광 시설 건설 후, 시민 동의를 받아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되 규모를 줄



경도관광개발 조감도

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경도 투자를 망설이던 때, 전남관광 사상 최고인 1조원 이상의 과감한 투자를 결단 해주신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박 회장의 특별한 고항사랑이 사리사욕 추구로 오해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청소년해양교육원 여수서 개원

해양안전교육바다로 생존수영 등 상시운영
수심 5m 스쿠버다이빙풀 등 교육시설 갖춰

청소년들의 해양안전과 생존 수영 교육 등 해양 인재 양성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청소년 해양전문교육원이 3일 여수에서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여수시는 국내 최초로 청소년에 특성화 · 전문화된 해양교육을 위한 해양교육원이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원식은 권오봉 여수시장과 주철현 · 김희재 국회의원, 도 · 시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테이프 커팅과 개원축하 조타기 퍼포먼스로 청소년 해양교육원 개원을 축하했다.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국 · 도

비 119억 등 총 180억 원을 들여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연면적 6270m2,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됐다.

1층은 수영장, 스쿠버 다이빙풀, 2층은 해양환경 탐험관, 해양안전교육관, 해양레포츠 체험관, 4D하프스클 영상관, VR 해양레포츠 체험관, 3층 · 4층은 다목적 강당과 최대 152명이 숙박할 수 있는 27실 규모의 생활관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8월 31일 본회의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의료법

-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 수사·재판 등 필요시, 환자와 의료인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CCTV 영상 열람 허용
- 영상정보 유출 등 행위 엄격 제한, 처벌 강화

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희재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여수 생활문화센터 건립 8억원, 화장동 공영주차장 신축 3억원



김희재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여수 생활문화센터 건립 8

억원과 화장동 공영주차장 신축 3억원 등 총 1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문화예술단체의 연습 공간과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건립되며 총 61억 1,600만 원을 들여 8월에 착공해 2022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1층은 공용공간과 주차장, 2층은 공동육아 나눔터, 마주침공간, 연습실, 3층은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학습실, 4층은 사무실, 다목적실, 스튜디오가 설치되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학동 34-8번지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화장동 공영주차장 신

축 사업은 총사업비 86억원을 들여 화장동 795-1번지 일원에 29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 3층의 주차타워를 2021년 12월까지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여수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여수시민 모두가 수혜 대상이 되고 58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화장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화장동 상가 및 원룸 지역 인근 주민 780명이 수혜 대상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여수시민의 생활 편의와 교통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재, 여수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비 48억 확보

교통신호제어기, 스마트교차로, 긴급차량 등 도입을 통해 대 시민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김희재 의원은 9월 2022년 여수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국비 4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ITS 사업은 교통 정보를 수집하는 장비 설치와 교통센터 개선, 분석 및 가공 시스템 등을 지원해 도심부의 교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통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을 통해 관광, 화물 수요 증가로 발생하는 여수시의 교통체증 및 보행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80억원이며, 국비 4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2022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34개 지자체를 이날 선정했다.

김 의원은 “ITS 구축을 통해 교통 흐름과 안전이 개선되면, 여수시내 교통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여수시가 안전한 스마트 교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올해 3월에도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을 설치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국비 2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SRT 전라선 반드시 조기 운행되어야”

김희재, 철도차량정비단 찾아 ‘SRT 전라선’ 준비 점검



김희재 의원은 지난달 4일 호남철도차량 정비단을 방문해 SRT 전라선 투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비단 방문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SRT 전라선 조기운행 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박정완·최무경·김종길)와 이선호, 강재현, 이찬기, 나현수 여수시의원, 여수시민 30여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정비단으로부터 전라선에 투입될 ‘SRT 206호’의 정비현황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 의원은 “SRT 206호의 정비가 늦어져 추석 무렵 전라선 투입에 차질을 빚게 됐다. SRT 조기 운행을 손꼽아 기다리는 지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단과 궤SR 관계자분들께서 10월쯤에는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완벽한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최고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전라선이 조기에 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SRT 전라선은 반드시 조기 운행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희재 의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 행사 승인 환영”

30개국 200만 명 방문, 생산유발 효과 4,000억 원

김희재 의원은 지난달 9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기획재정부 심사를 통과해 국제 행사로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시민과 함께 이뤄낸 쾌거”라고 밝혔다.

이번 국제 행사 승인은 대회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2026년 7월 17일부터 한 달간 돌산 진모 지구와 여수시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전 세계 섬을 가진 국가들을 초청해 개최될 예정이다.

박람회는 30개국 200만 명 이상의 관람객과 6,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을 가져와 4,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2026년여수세계섬박람회는 아름다운 여수의 365개 섬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섬의 가치와 미래를 이야기하며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국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제 행사 승인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해주신 여수 시민과 세계로 3대 시민운동 실천본부, 여수향우회, 전남도·여수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김희재 의원, 21대 국회

‘헌정대상 모범상’ 수상

김희재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의원 헌정대상(모범상)’을 수상했다.

법률연맹은 지난 7월 6일 제21대 국회의원 1차년도 국회의원활동을 평가항목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해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당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으로 부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그 능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고 여수사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희재 의원,

‘광주 붕괴사고’ 재발 방지 법안 발의

관리·감독 책임, 불법 하도급 처벌 등 강화

김희재 의원은 지난달 10일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의 불법 하도급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48건, 2019년 38건, 2020년 43건으로 불법 하도급 적발 사례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원청이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했다.

또 불법 하도급으로 얻은 부당 이익을 몰수·추징, 하도급자의 자진 신고 시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광주 학동 사고와 같은 인재(人災)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 보건의료노조 간담회 21.9.2

보건의료노조 파업철회 협상 라결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보건의료노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보건의료노조 여러분과 그간 어려운 협상을 진행하신 정부 당국 실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소병철, 국가 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발의

“혁신·미래기술 성장발판 마련…국가 미래 발전 견인차 될 것”

소병철 의원은 지난달 24일 “백신·반도체 등 혁신·첨단 산업 분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전략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선제적·체계적·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전 부처의 기술 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지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신설하고,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술집약도와 기술혁신의 속도 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핵심경쟁기술’과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게 된다.

주요 지원 대책은 ▲ R&D확대 및 인프라지원 ▲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 인력양성 ▲ 기술보호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뉜다.

또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를 지정하고, 항만·도로·용수·통신시설 등의 기반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R&D 지원도 강화했다.

세제지원으로는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하고, 각종 부담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거를 마련했다. 연 1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도 개선토록 했다.

핵심경쟁기술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도,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보다 가중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개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핵심기술 육성·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해 국가 단위의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획기적인 지원을 제도와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비하인드 스토리

줄다리기 협상 뒤 야당 간사가 먼저 포옹 청하고 합의 타결 송영길 대표, “5선 기간 해결 못 한 일, 소병철 의원이 해내”

소병철 의원 전략과 독심 법 제정에 큰 역할

역사적인 ‘여순사건특별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 소병철 의원이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관심을 끌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7월 9일 ‘여순 10·19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가 주최한 범도민 환영 및 공청회에 초청 연사로 참석해 법안 성안부터 국회 통과 등 여러 에피소드를 밝혔다.

행안위 통과를 위해 야당 간사와 줄다리기 협상 과정이 눈길을 끌었다.

소 의원은 “야당 간사에게 대한민국 법전에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표현은 최초일 것이라고 설득했다”며 “합의 이후 야당 간사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법안을 반대했던 건 아니라며 여야 합의의 표시로 포옹을 먼저 청해 둘이서 포옹하고 협

상을 마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런 합의 과정이 특별법이 행안위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회의 통과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송영길 당 대표와 유가족과 유족회 등 관련 단체의 뜨거운 반응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송영길 대표는 특별법 제정 직후 본청 앞 계단에서 “친·외가가 다 이쪽이어서 태백산맥의 현장이었고, 어머니가 사법고시 공부하란 이유가 젊고 똑똑한 애들, 오빠들, 언니들 전부 빨갱이로 몰려 죽더라. 그러니 노동 운동해도 좋은데 안 죽으려면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널 보호할 수 있다고 여순사건을 접한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유가족들께 죄송하던 말씀 이후 5선 의원이 하는 동안 이거 하나를 해결을 못하고 왔었는데 진짜 소병철 의원님 들어오니까 해결이 됐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당시 이른 아침부터 여순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온 유가족과 관련 단체, 그리고 격려해주신 송 대표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의 발의와 28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년의 국회 장벽을 넘어 73년의 피맺힌 한을 풀 수 있었던 데는 그야말로 법안 성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소처럼 밀어붙인 소 의원의 전략과 독심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소병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핵심사업 현장 점검

예산 확보, 중앙부처·전남도 지원 전략도 논의



소병철 의원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달 20일 핵심 사

업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

소 의원은 이날 박람회조직위 양선길 기획본부장과 순천시 도로과·공원녹지과·건설과 공무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2022년 예산 확보와 중앙부처 지원 전략도 논의했다.

2023정원박람회에 새롭게 추가될 볼거리 사업은 순천만 브릿지가든 조성 사업, 죽도봉 문화체험 숲, 한반도 분화구 정원, 실내정원, 동천변 저류지 생활 숲 등 5개이다.

소 의원은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니, 이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전남도의 지원을 확보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부담 대폭 해소된다”

소병철, 양육비 긴급지원 최대 18개월로 연장

최우선 변제 채권에 양육비 조항 신설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긴급지원을 최대 18개월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병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채권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긴급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양육비 이행 명령을 얻기까지는 평균 18개월에서 20개월이 소요돼 한부모가정의 경제

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2년마다 마련하도록 했으며,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 기간은 12개월로 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8개월로 확대했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장래의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도록 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 장래의 양육비를 최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한부모가정에서도 행복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으로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병철, 순천 월등복숭아 수확 일손돕기 펼쳐



소병철 의원은 지난달 6일 오전 순천시 월등면 복숭아 재배농가를 방문, 복숭아 수확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사진>

소 의원은 복숭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받고 수확을 마친 뒤 “월등복숭아가 명품 복숭아로 순천의 대표 브랜드 농산물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일손돕기를 마친 소 의원은 월등복사골 영농조합법인 회원들과 김수종 농협이사, 나상귀 지점장, 김정희 도의원, 오행숙 시의원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월등복숭아의 장기적 발전과 대표 품종 육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소병철

“군인 성범죄 민간법원 담당, 인권 보장 진일보”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의원은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했다.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

원이 재판하도록 하고있다.

소 의원은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를 민간 수사기관, 민간법원이 담당하게 된 것은 군인의 인권 보장에 진일보한 것”이라며 “그러나 평시에는 군인들에 대한 재판관할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저의 개정안이 부분적으로만 대안에 반영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반드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군 내부의 범죄가 신속·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 “사학 자율성과 부정비리 엄단은 구분 돼야”



사립학교 교사 채용 교육청에 위탁 의무화

부정·비리 연루 임원 복귀 제한…사립학교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서동용 의원은 지난달 19일 사학의 자율성과 부정비리 엄단은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사립학교가 교육기회를 제공한 것은 존중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학의 공공성, 도덕성, 투명한 운영 또한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교육상임위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민

주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교원 신규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의무화, 교육청에서 위탁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복귀 제한 시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사학의 인사권과 징계권 관할청 직접 관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서의원은 이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막

고 국회의원으로서는 책임과 역할을 다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야당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입법독재’라고 이야기 하지만 자신들이 요구해 소집된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퇴장한 것”이라며 “사학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낡은 관성은 빠르게 혁신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교육체제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용,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고등교육 위기 극복 및 교육재정교부금법 의견 수렴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은 지난달 26일 유튜브 '서동용TV' 채널을 통해 '고등교육재정 확대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서동용 의원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이 주관하고 전국교수노동조합, 반값등록금운동본부 등 총 7개 단체가 참여했다.

토론회는 지난 3월 대학 신입생 미달사태로 현실화된 고등교육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논의하

고 교육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반상진 교수(전북대학교)와 연덕원 연구원(대학교육연구소)이 '고액 대학등록금의 부담 완화와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 '역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검토 및 쟁점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강명숙 교수(민주평등사회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좌장을 맡고 최우성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 김병국 전국대학노동

조합 정책실장, 이해지 반값등록금운동본부(전대넷 집행위원장), 정태석 전국교수노동조합 정책실장, 박용국 영산대학교 부장이 참여했다.

서 의원은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공공 투자 규모는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인 1.1%에 크게 못 미치고 이마저도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약 0.4% 수준에 불과하다”며 “설상가상으로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고등교육 생태계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서동용 의원,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 수해복구 현장 점검



서동용 의원은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6월 19일(토)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현장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진수화 광양시의회의장, 김길용 도의원, 조현욱 시의원 등과 현장을 방문한 서 의원은 “작년과 같은 수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의 안전과 불안 해소를 위해 철저히 점검하고 우기가 되기 전 복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초여름 더위에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임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는 “주

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꼼꼼히 살피고 대비해 복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견고한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찾은 현장은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와 섬진강댐 방류 원인으로 진월면과 다압면 일원의 침수 및 보강도 제방이 붕괴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말까지를 목표로 복구가 한창이다. 재해 복구사업비 약 69억원 전액은 국비로 확보한 바 있다.

서동용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6억원 확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전에 크게 도움"

서동용 의원은 순천·광양·곡성·구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난대비,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광양시 성황근린공원 조성 6억원 △광양 서천산책로 안전난간 설치 2억원 △광양시 진상면 섬거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3억원 △곡성군 마을하수처리장 효율 향상 사업 4억원 △곡성군 옥과 영귀교 보수보강 공사 5억원 △

곡성군 옥과 죽림천 소하천 정비사업 5억원 △구례군 간전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6억원 △구례군 서시천 퇴적토 준설 5억원 등이다.

곡성군 마을하수처리장 효율 향상 사업은 곡성읍·겸면·임면 일대 관로정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하수처리 효율이 향상되고, 침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곡성군 옥과 영귀교 보수보강 공사 사업은 옥과 소재지에서 국도 13호선을 연결하는 영귀교의 교면포장과

교좌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구례군 간전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2층, 300㎡ 규모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 지역민의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동용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전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숙원사업, 주민 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대학생 교육영상물 접근권 보장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서동용 의원, 온라인 수업 영상물에 해설자막 등 의무화

서동용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학 내 장애학생의 교육영상물 접근권을 보장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장애인 대학생들은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비대면 원격 영상수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수업 중 활용되는 각종 영상물에 화면 해설, 자막 등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편함

을 넘어 등록금을 내고도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수업 중 활용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입학고사를 포함한 입학전형, 영상물 정보 접근권 보장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동용, 법안 투표율 상위 10위 의원에 선정

서삼석·조오섭 의원도 상위 10위…법률소비자연맹 평가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법안투표율을 평가한 결과 서동용 의원이 서삼석·조오섭 의원과 함께 '법안투표율 상위 10위 의원'으로 선정됐다.

연맹이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표결을 한 총 822개 법률안을 대상으로 의원별 법안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말까지 법안투표율은 81.02%에 달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소속 의원의 법안투표율이 87.86%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72.50%, 비교섭단체는

67.65%였다.

법안투표율 90% 이상 의원은 128명이었고, 다음으로 80%대가 70명, 70%대가 37명이었다. 이어 60%대는 21명이었고, 50%대 15명, 40%대 12명, 40% 미만 17명이었다

선거구별로 보면 최고의 법안투표율은 세종자치도였고, 2위는 전남(95.86%), 다음이 광주시(94.81%)였다. 상위 10위에는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가운데 서삼석(99.88%), 서동용(99.88%), 조오섭(99.76%) 의원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정훈 의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화 해야”

“윤희숙 의원 부친 농지 매입은 전형적인 농지 투기”

“의원직 사퇴는 무책임...사퇴는 국민이 요구할 것”

신정훈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의 근본적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국회의원 부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윤희숙 의원께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등 제도 확립이 필요한 이

유를 몸소 보여주셨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윤 의원 부친의 세종 땅은 전형적인 농지 투기의 일종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이 농사를 짓겠다며 3,300평의 토지를 구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취

득자격을 획득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으로 신고해 실경작 증명을 회피하는 방식은 농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범죄 수법”이라며 “국민의힘이 본인의 단순 소명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면죄부를 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직 사퇴에 대해 “선출직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하나의 계약인데, 주관적 감정으로 그만두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자금 출처 등 객관적 증거를 갖고, 명확히 소명할 책무가 있다. 잘못이 드러난다면 사퇴는 국민이 요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제도화를 거듭 제안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권익위 등에 조사를 맡길 순 없고 뿌리 깊게 박힌 부동산 투기 근

절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백지신탁은 부동산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이들에게만 고위공직을 맡겨 사회적 기풍을 일신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되찾자는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다”며 “이 제도가 말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고위공직자 등이 등록, 공개한 부동산의 실소유 여부를 심사해 ‘투기성 부동산’을 걸러내도록 국회가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률 ‘꿈수’로 채웠다

신정훈 의원, “절반 가량이 예외규정 선발” 지적

공공기관 9곳 발표대로면 27%, 실제 채용은 13.9% 그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활용해 지역인재 의무비율을 채우는 꿈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 확산을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명시하고 있고,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2019년 21%에서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로 매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해 지난해 광주전남혁신도시 9개 기관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1280명 가운데 346명(27%)을 뽑으며 법적인 채용률(24%)을 넘겼다.

하지만 이는 예외규정을 적용한 꿈수로 특별법은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시험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을 뽑을 경우,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 채용을 할 때도 의무채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예외규정 적용 시 지난해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7%에서 절반 수준(13.9%)으로 툭 떨어진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절반가량을 예외규정으로 뽑아 의무화 비율(24%)을 넘기는 꿈을 부린 셈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 208명 중 191명을 예외규정으로 채용했다. 채용인원 대부분을 예외규정으로 뽑아 실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대상은 17명에 불과했다.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47.1%에 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채용률은 3.8%로 적다.

신정훈, 한정에 환경부장관 만나

나주SRF 문제 해결 방안 논의



신정훈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한정에 환경부장관을 만나 나주 SRF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신 의원 이날 나주 SRF 문제가 지난 2007년 환경부의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정책’에 의거해 출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환경부가 나주 SRF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이어 장성야적장 SRF

연료 품질검사 주민참관 문제를 조속히 결론짓기 위해,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나주시 부시장, 지역난방공사 신성장본부장 등을 불러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장성야적장 SRF 연료 품질검사에 주민참관을 보장해, 추가 조사 및 샘플링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몇 가지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신정훈 의원, 화순군의원들과 풍력발전 간담회 개최

주민 편에서 주민발의조례안 열린 자세로 처리 촉구



신정훈 의원은 풍력발전 시설과 마을 간 이격 거리를 강화하는 화순군 주민참여조례와 관련,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7월 9일 화순에서 군의원 간담회를 갖고 화순군 풍력발전이격거리 확보대책위원회가 발의한 ‘군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주민발의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는 지난 달 26일 ‘풍력발전 시설 저지 화순군대책위’와의 면담에서 신 의원이 “합리적 해결을 모색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대책위는 풍력발전소 건설 시 10호 이상 거주지에서 2km, 10호 미만 거주지에서 1.5km 떨어지도록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조례 개정안을 주민 발의했다.

이와 관련 군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와 6월 정례회를 통해 해당 조례를 심사했지만 두 차례 모두 보류한 상황이다. 현행 조례는 각각 1.2km,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한 거리를 완화해 주민

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신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 업무인 화순 풍력 문제는 반드시 풀고 가야 할 현안”이라면서 “과정 상격한 감정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역민을 밟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의회가 주민 편에서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하며, 타협하고 설득해서 풀어가지 않으면 지금의 풍력사업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신정훈

“광주시·한남 ‘나주SRF 사태 초래’ 사과해야”

상응하는 책임과 재발방지책 마련도 촉구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환경부가 나주SRF 연료에 대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광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제4차 당정협의·간담회에서 “장성야적장 SRF 연료 품질 검사 결과, 수분과 납 등 두 가지 항목에서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전량 폐기 처분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나주 SRF 발전소도 당분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신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 뿐만 아니라 광주시도 이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고 상응하는 책임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에게 데 솔직하고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의 엄정하고 투명한 품질 검사 및 적극적인 행정처분 의지를 평가한다”며 환경부를 향해 “나주 SRF 문제 해결을 위해 SRF 연료 품질과 배출가스 기준 강화와 SRF 정책의 타당성 재검토 등 향후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그동안 SRF 연료 품질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온 나주시와 시민 여러분의 노력에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며 “당 탄소중립특위와 함께 나주SRF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농지은행관리원’ 설치로 투기 방지 및 관리 효율성 도모

농지은행사업 자료 목록 구체화 및 제공 의무 명시

이개호 의원이 농지투기 방지 및 농지은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표 발의한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2건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을 초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와 관련해 매입한 땅 대부분이농지인 것으로 확인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법적 개선방

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한 개정안은 ‘농지은행관리원’ 설치를 통해 농지 현황을 조사·감시하고 정보수집 분석 제공 등 농지 상시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

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 개선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자료 수집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료 및 정보 요청 목적과 목록을 구체화하고 자료제공 의무도 명시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 외에도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 체형

장성 동화~서삼 국지도 49호선 4차로 확장사업 예타 통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전망

담양 고서~대덕 국지도 60호선도 5개년 계획 반영 기대

이개호 의원과 장성군이 심혈을 기울인 장성 동화~서삼 국지도 49호선 확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일괄예타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 사업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전망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성 동화~서

삼 국지도 49호선 확장사업(총사업비~1471억)은 장성 동화면 남평리와 서삼면 장성물류센터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완공될 경우 고속도로와 장성물류단지의 확장 연결로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뿐 만 아니라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지역개발촉진이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장성 동화~서삼 49호선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 장성군과 함께 오래전부터 국토부와 기재부장·차관들을 수차례 면담하고 예타 통과를 통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와 별도로 담양 고서와 대덕을 잇는 국지도 60호선 확포장 공사(총사업비 484억)은 예타면제 사업으로 이미 국토부 자체평가를 통과한 바 있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영농 목적 취득을 제한하는 ‘농지법’ 개정안,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함께 통과됐다.

이 의원은 “논, 밭을 농사가 아닌 돈 버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농지투기는 근절돼야 한다”며 “농지가 식량안보를 지키는 자원이자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계획 반영을 통한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예타와 자체선정결과를 바탕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9월 중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장성 동화~서삼 국지도 49호선 확포장 공사 추진 확정으로 향후 주민 이동 편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담양 국지도 60호선 고서~대덕 확포장 공사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최종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 영광 승마장

등 실외정원 3곳 유치

영광·함평·장성에 실외정원 3곳이 조성되고 국립정원문화원 설립이 차질없이 추진된다

이개호 의원은 “지역구인 영광, 함평, 장성 3곳이 산림청 주관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중 실외정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은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치유공간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조성사업에서는 △영광 승마장 △함평 천지종합복지관 △장성 황룡강 천변 등 세 곳이 실외정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곳에는 각각 5억 원(국비 50%)이 투입돼 지역적 특색에 맞는 정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이개호 의원과 담양군이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원문화원 건립 2차년도 예산 36억 원이 반영됐다.

총사업비 196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 한국정원문화원 건립사업은 담양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지역 내 정원문화산업 예산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연관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우리 지역이 정원문화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달 5일 송영길 대표와 함께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밥상물가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개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이개호 의원은 최근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및 원활한 진상조사 활동을 보장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20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10년 만에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사 정리 및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배·보상 조항이 빠져 완전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고, 조사기간도 3년에 불과해 충분한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소멸시효 규

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진상규명과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해발굴단을 설치해 희생자, 피해자를 추모하고 배·보상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조항을 신설,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이 의원은 “과거 해방 및 한국전쟁 이후 어두운 역사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까지 상향

설추석 30일 전부터 7일 후까지 적용

이개호 의원(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이 명절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대해

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규정된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돼 성수기인 설 및 추석 등 명절에 농축수산물들이 매출 감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및 올해 설 명절의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 선물 가능 가액을 일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했으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범위를 민간에

까지 확대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상한도 적용치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해 그 가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및 농어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명절기간동안 만이라도 우리 농축수산물에대한 선물가액 한도 상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 “외국인 노동자 숙소 해법 마련을”

해수부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지연 질타

이개호 의원이 최근 외국인 노동자 숙소 설치기준 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 현장의 현실을 지적하고 농식품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13일 국회 농해수위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외국인 노동자 숙소 설치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 농지에 설치된 기숙사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시설채소 농가 등이 생업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 차원에서 이런 농

촌현장의 어려움을 잘 살펴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해수부에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땅 독도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와 관심이 매우 커져, 올해 독도 방문객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도매시장 운영 미비점 개선·보완하는 농안법 개정안 발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부처 장관 추천인원 포함, 공정성·객관성 제고
도매시장법인 지정 취소 시 도매시장 개설자·부처 장관 협의하도록

김승남 국회의원은 지난 7월 21일 도매시장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농안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을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법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장관과 협의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가 단독으로 취소

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하는 법인 지정 뿐만 아니라 지정의 취소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또 상장애외품목의 지정 등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심의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구성원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가락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서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농수산물·농업시설 피해액 포함해야”

김승남 의원, 농어촌 특수성 반영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김승남 의원은 지난 7월 13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업시설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농산물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아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시 농·수산물과 산림작물, 가축, 농·어기구, 농수산

물 관련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농어촌지역의 피해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에 대한 국고 지원이 없어 농어촌 지역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피해지원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산림조합중앙회 김승남 의원에 감사패 전달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입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승남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주와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으로 산림과 임업 발전에 힘써왔다.

최창호 회장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임업인을 돕는데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양질의 산림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산림조합 금융 활성화 방안에도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김승남, HMM 노사 갈등

해수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 촉구

김승남, 인력부족장시간노동 등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김승남 의원은 지난달 25일 HMM(옛 현대상선) 노사 분규와 관련, 해양수산부가 선원들의 인권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수부는 해운재건을 위해 배를 더 많이 만드는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선원 직군이 메리트 있는 직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며 "HMM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해 해수부도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HMM 노사는 지난 7월부터 임금·단체협상을 시작해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 교섭을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다 지난 2일 파업 직전 극적으로 노사분규를 타결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88.3%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불법농지취득범죄 수익 환수 추진

현행 농지법 범죄수익 최대 5천만 원 벌금만 부과

불법농지취득 수익 끝까지 환수해 농지투기 근절 기대

김승남 국회의원은 지난달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

지만 불법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렵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 농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부당이득에 관한 환수 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한다.

수익 원의 범죄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수할 방법이 없고, 법원판결이 확정되기 전 불법 수익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몰수보전 조항이 없어 범죄수익의 처분·은닉을 막기도 어렵다.

김 의원은 "범죄수익은닉법에 농지 불법취득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해 농지투기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1기 더민주 목포청년정치아카데미’ 특강



김승남 도당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목포지역위원회(위원장 김원이) 주관으로 열린 '제1기 더민주 목포청년정치아카데미'에 초청 강사로 나서 특강을 했다.

김 위원장은 특강을 통해 청년들의 현실과 이상의 괴리문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지역현안인 의과대 설립문제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밝혔다.

목포 청년정치아카데미에는 김 위원장 외에 김영록 전남도지사, 고민정 의원, 장경태 의원, 김종식 목포시장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8월 31일 본회의

종합부동산세법

○ 1세대 1주택자 증부세 부과 기준 조정
- 공제액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종자 ‘명칭같이’ 꿈수 뿌리 뽑는다!

주요 작물 3개 중 1개 이름만 바꿔 속여 팔아 부당이득
윤재갑 의원, 종자산업 개정안 대표발의

윤재갑 의원은 같은 종자임에도 다른 이름을 붙여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성 중요한 작물의 종자의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고, 각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품종이 동일한 유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으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면서 종자업체가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2015년 국립종자원이 고추, 무, 배추 등 625개 품종을 검사한 결과 전체 품종(625개 품종)의 약 27%가 이명칭 품종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고추의 경우 A업체의 ‘PR조대강’ 품종을 B업체가 이름만 바꿔 ‘PR강심장’으로 판매했고 양파의 경우 C업체의 ‘킹콩’ 품종을 D업체가 ‘나와바리’로 판매했다.

이처럼 종자시장에서 이(異)명칭 불법종자가 끊임없이 유통되는 이유는 처벌수위가 수익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을 판매하려는 자는 등재필증 게시를 의무화하고, 1품종 이(異)명칭 사용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윤 의원은 “종자업체들이 동일한 품종에 다른 이름을 붙여 신제품처럼 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종자 ‘명칭같이’ 등의 꿈수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산물 생산·가공·저장 용도 간척지 활용해야”

윤재갑 의원, 간척지 이용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재갑 의원은 지난달 4일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간척지 활용사업구역 내에서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

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임업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임업인들이 간척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간척지를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간척지 활용도를 높였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간척

지에 나무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등 임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임업·임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간척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임업인들이 개정안을 통해 간척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임업·임산업 경쟁력 강화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농촌 집가꾸기 해남·완도·진도 39가구 선정

윤재갑 의원은 농촌의 낡은 집들을 고쳐주는 ‘농촌 집가꾸기’에 해남·완도·진도의 취약계층 39가구가 최근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08년부터 시작된 ‘농촌 집가꾸기 사업’은 농식품부가 예산을 지

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재능 기부로 지붕과 창호 개량, 수세식 화장실 설치, 난방시설 개·보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사업대상은 무의탁 독거노인, 장애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윤재갑, 기후위기 대응 산림정책 개선 토론회

윤재갑 의원은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함께 13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림 정책의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산림청은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3400만 톤의 탄소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해당 계획은 수많은 논란을 낳았으며, 탄소흡수원 기능과 더불어 생태계 보존과 생물다양성 측면을 지닌 산림의 다양한 역할과 가치를 두고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지속돼 왔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방식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산림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고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이우균 고려대 교수 ▲홍석환 부산대 교수 ▲류연수 대구경북연구원 전문위원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산림 정책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이동근 국회기후변화포럼 운영위원장을 좌장으로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정인철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 ▲구경아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 ▲장진구 산림조합중앙회 기후변화팀장 ▲사공정의 충남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윤재갑, 산림조합중앙회 감사패 수상



윤재갑 의원이 지난달 17일 산림과 임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윤 의원은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소유자의 최소 면적을 정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직불제법을 발의하는 등 임업법활동을 통해 산림·임업 발전에 기여했다.

지난 4월에는 그동안 간척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임업인들을 위해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새로 도입된 나무의사제도의 양성기관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임업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다.

더불어민주당 8월 31일 본회의

기후위기대응법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규정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각종 시책,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함.

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서삼석, “기후위기 대비 농촌 물관리 예산확대 시급”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 사업비 60%반영 그쳐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24일 기후위기로 인해 되풀이되는 가뭄과 호우에 대비한 농촌 '물' 관리 예산이 부족해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수개선 사업 결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습침수구역 배수개선 사업비가 필요 예산의 60% 정도 반영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상습침수농경지 총 30만

3000ha 중 지난해까지 배수개선 사업이 완료된 면적은 64%인 19만4000ha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나머지 10만9000ha 면적에 대해 2030년까지 배수개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연간 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2016년 이후 연평균 반영예산은 2934억원에 그쳤다.

또한 2020년 기준 국내 논 83만ha 중 10년 빈도 가뭄에도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수리안전답' 비중은 52

만ha로 63%에 불과해 농촌용수개발 사업예산 확대 필요성도 시급하다.

하지만 2016년 4033억원이던 농촌용수개발 사업예산은 지속감소해 2021년 3195억원으로 21%가 줄었다.

서 의원은 “되풀이되는 폭우와 가뭄에 대비한 농촌 용배수 예산확대가 시급하다”며 “관련 예산과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량자급률 제고, 제도적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서삼석 의원,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국가 노력 의무 헌법 명시 필요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개호 의원, 위성곤 의원, 광주전남연구원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식량자급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 위기에, 식량 위기까지 더해진다면 인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농작물 생산비 보장, 재해보험 확충,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법과 제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평식 한국농업개발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기후위기 시대 식량자급 대응방안’

주제로 미래 농업의 역할과 식량주권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등으로 세계 식량 위기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디지털 농업 추진 및 해외 식량기지 개발 등 식량 자급의 지속적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식량주권은 국가안보 차원의 중차대한 과제”라면서 “식량자급률 확보 국가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국가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이고 제도적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전남 시·군에 부녀회장 수당지급 협조서신 발송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5일 전라남도 22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의장에게 ‘새마을부녀회장 수당지급 조례제정’ 협조를 부탁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서 의원은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부녀회장 수당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

의 했지만 일부 시군에서 이미 수당지급 사례가 있는 만큼 법안 통과 전이라도 관련 조례제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 것이다.

서 의원은 “농도 전남은 코로나로 인한 식량위기,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지역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라며 “위

기를 극복하고 농어촌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녀회장 수당지급 조례제정을 건의드린다”라고 그 배경에 대해 밝혔다.

서 의원은 “부녀회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굵은 일을 도맡아 해왔지만 임명 미비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삼석, ‘지방소멸 위기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

당 정책위, 국회 행정안전위, 광주전남연구원 공동 주최
지방 소멸 대응 논의 및 법 제도 개선 등 대안 마련 모색

서삼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달 24일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지방소멸 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당 정책위원회(박완주 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영교 위원장), 광주전남연구원(박재영 원장)과 공동주최로 열렸다.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 부원장과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정안전 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김현호 전 부원장은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방지 전략’ 주제로 외국의 대응 정책과 지자체의 대응 정책 방향을, 민현정 실장은 ‘지역 인구지형의 진단과

전환적 대응, 그리고 필수조건’ 주제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신속한 입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영 전문위원은 ‘지방 소멸 위기 관련 법안 현황 및 입법안 검토’ 주제로 법안의 적합성과 효율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유출로 30년 내 소멸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92%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 소멸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 의원은 “현재 행안위에 계류중인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국회 차원의 지방 소멸 위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포-비금 연도교 건설 사업 에타 통과 “환영”

서삼석 의원, “생존 이동권 확보·관광객 증가 기대”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추포~비금 연도교 건설’과 ‘암태 신석~단고 국도 개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것과 관련, “지난 10년간의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며 환영했다.

서 의원은 “이번 에타 통과는 신안군, 군의원, 군민들의 열정과 노력의 산물이며, 신안 군민의 생존을 위한 이동권이 확보되고 물류비 감소, 관광객 증가까지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14개 읍·면 중 13개 읍·면이 연륙 연계 도로망이 구축된다. 이로써 신안군이 추진하는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완성이 더 가까워지고,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한 신안군의 계획에도 탄력

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난 2019년 천사대교 개통으로 3배 이상 관광객이 증가했던 효과가 재연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 의원은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관광객 증가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섬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다”며 “육지와와의 이동 거리와 시간 단축으로 의료·교육·문화 등 주민 삶에 불편한 점 등 다양한 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도 2호선 신석~단고 구간은 갓길 없고 굴곡이 심했던 구간으로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천사대교 개통으로 증가된 교통량을 수용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삼석 의원, “왕겨·쌀겨 폐기물 제외 환영”

서삼석 의원은 지난 5일 환경부가 왕겨·쌀겨가 폐기물에서 쉽게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왕겨·쌀겨를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 의원은 현장 농업인들의 개선요

구를 반영해 지난 6월21일 왕겨·쌀겨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행규칙 등의 개정 없이도 전문가그룹의 의견 제시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자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왕겨, 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돼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9월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